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표결 처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민주 본회의 직전 발의

박찬대 “김용현 한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실토… 내란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박성준 의원 등 17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탄핵안은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

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국회가 지난 5일 오전 1시계 계엄해제결의를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 건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차이는 피소추자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 대통령 탄핵 이건의 ‘한동훈-한덕수 체제’(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점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애초 한 대행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고 하며 탄핵 데드라인을 이날로 늦췄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는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단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 사태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했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표결 전 의장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151석으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지원금 지급 나서야”

도의회 경산건위,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대응 등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익산·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전북자치도 오택필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력한 소상공인연합회장, 북태만 상인연합회장, 이상민 의원 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북자치도 오택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기 하강국면과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2025년 1분기까지 비상 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자금지원,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민생현장 지원과 도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없도록 수출 애로 비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여봉 원장은 도내 기업 수출을 위해서 마케팅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상담 강화하고 통상다터 컨설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한종관 이사장은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약속했으며, 티몬·위메프와 관련하여 지원했던 전북 위기극복 특례 보증 잔액 300억원을 민생회복에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로 강력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위기 속에 전북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전북자치도 특례와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긴급대책 차원에서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등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은 사회적 재난 수준에 해당함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사회적 재난지역으로 선언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김 위원장은 “전북경제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탄핵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참석하신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제안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감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생 의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도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해야”

도의회 재난·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난·안전 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서 정책개발 목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안전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주식회사 창해컨설팅 및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에서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정운섭 대표의 용역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정운섭 대표는 △재난·안전 관련 선형 연구 정책 분석, △전북자치도 재난·재해 현황 및 재난대응 시스템 분석,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재난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민 안전 통합 센터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및 신종 재난에 대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재난 대응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대표위원은 “전북자치도가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의회, 소상공인협의회와 민생경제 현안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김제시 소상공인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국정 혼란 상황 속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백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 고영선 소상공인협의회 회장 외 4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증대, 고금리로 인한 경영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지역 상권이 직면한 복

합적 위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차질을 가할 계획이 다. 아울러 향후에도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발전협의회 “프로야구 제11구단 유치하자”

전북발전을 위한 순수한 뜻을 가진 도민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프로야구 제11구단 유치 등 4개 항목의 전북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 최한양 회장과 회원 20여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등 4개 항목을 내용으로 한 전북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한양 회장과 이광영 사무국장, 유하봉 한국미배비전연구원 이사장,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송재현 한국사이버, 실버배구연맹 고문, 이은경 씬터 재활 노인복지센터 원장, 이미숙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서 힘을 보탰다.

최한양 회장은 자신들이 만든 “전북발전연합회는 전북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과감히 허물고, 대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운동단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전북발전연합회는 동부권 및 남부권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과 프로야구 제11구단 유치,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북 이전, 345 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대응 계획수립 등 4대 핵심과제에 선진화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강한 문화·경제를 바탕으로 ‘전북도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등 삶의 대변혁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 실효성 확보 등 전북발전 비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 최한양 회장과 회원 20여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력도 낮아지면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전북발전의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전북발전연합회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전북의 행정기관과 협력해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농생명지구의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민간 투자이고, 민간 투자의 근원은 이익 창출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이 정체인 것은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각종 규제와 투자와 수익의 선순환 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했다.

이어서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프로야구단 유치로 삶의 대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는 타 스포츠에 비해 입장료, 광고 등 연관 산업이 다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 전북은 전통적으로 전주교와 군산상일교(구 군산상교) 등 야구 명문 고교를 중심으로 높은 야구 열기를 보유하고 동원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과거 ‘쌍방울 레이

더스’ 구단을 그리워하는 도민도 많다.”며, “이에 우리 전북발전연합회는 전북도민의 화합과 전주-완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완주지역에 야구장을 건립하고 프로야구단을 유치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전북발전연합회는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 야구장 건립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의 광범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프로야구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모색하는 등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농협중앙회 본부)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제를 우리 전북발전연합회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농협 본부 이전, 농협 금융부문 이전, 농업 경제부문 이전 등에서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 전북에 유망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전선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우리 전북발전연합회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345KV 신성읍에서 신계동까지 115km에 250 송전탑 대안의 하나로 호남고속도로를 지중화하여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모인 시민단체에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 좋은 의견”이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한전, 신정읍-신계룡 345kV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 kV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업 관련 예정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안주·정읍 도의원, 안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 시민대책위, 송전(탑) 선로 금산군 경우 대책위원회, 고압송전탑 반대 부안군 대책위,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대책위 소속 회원 20여 명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에 의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협의 없는 송전선로는 무효라며, 처음부터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 주민들이 신청한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주

민대표 위원구성 적법성 문제’ 민원을 검토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에 위원회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 표명’을 주문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면서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선출직 배제 원칙’에 위반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위에서는 “이러한 것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광역 경과 대역을 결정한 한전의 잘못된 폼수 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로써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1단계 광역 경과 대역 노선 결정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